

헌법집중 핵심암기장(제10판) 추록

P102 각주 78) 내용 대체 (대법원 판례 반영)

78) 헌법재판소는 종래 “변호인 자신의 접견교통권은 단지 형사소송법 제34조에 의하여 비로소 보장되는 법률상 권리에 불과하다” 고 판시하였으나(헌재 1991.7.8. 89헌마181), 이후 “변호인의 조력권 중 변호인의 변호권은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보호되어야 한다” 고 판시하였고(헌재 2003.3.27. 2000헌마474; 2017.11.30. 2016헌마503), 최근 “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보장되어야 한다” 고 판시하였다(헌재 2019.2.28. 2015헌마1204). 한편 대법원은 “미결수용자가 가지는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그와 표리 관계인 변호인(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)의 접견교통권과 함께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고 있다(헌법재판소 2017.11.30. 2016헌마503 결정, 헌법재판소 2019.2.28. 2015헌마1204 결정 등 참조)” 고 판시하였다(대법원 2022.6.30. 2021도244).

P103 각주 79) 내용 대체 (대법원 판례 반영)

79) 헌법상 ‘인신구속시 접견교통권’ 을 종합하면, ① ‘피구속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교통권’ 의 경우, 피구속자의 접견교통권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포괄되는 헌법상 기본권이고(헌재 1992.1.28. 91헌마111), 변호인 자신의 접견교통권은 피구속자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표리관계에 있는 기본권으로 볼 수 있으며(대법원 2022.6.30. 2021도244), ② ‘피구속자와 비변호인 간의 접견교통권’ 의 경우, 피구속자의 접견교통권은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무죄추정의 원칙에 근거하고, 가족 등 타인의 접견교통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근거하는 헌법상 기본권이다(헌재 2003.11.27. 2002헌마193).